

# 광주 5·18광장 극우 집회 불허...15일 금남로 집회 예고 '긴장'

### 강기정 시장 "尹 내란동조·선동 극우는 타협 대상 아냐...혼란만 초래" 전한길·황교안·보수단체 등 집회 강행 예정에 시민사회와 충돌 우려

윤석열 탄핵반대를 주장하는 극우 유튜브와 단체들의 연이은 5·18민주광장 집회 사용 요구를 놓고 광주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정율성 생가 논란에 이어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가 또 한번 이념 논쟁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11일 광주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위한 극우 유튜브의 5·18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에 대해 "충돌을 유발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집회를 강행하는 극우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극우 유튜브 안전권, 이른바 극우 일타강사 전한길씨 등 내란동조 세력이 잇달아 5·18민주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으나, 이들은 폭력과 혐오,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인물들"이라며 "12·3 계엄이 위법·위헌하다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도 내란에 동조하고 선전·선동을 일삼는 반헌법, 반민주주의 집회는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허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5·17 계엄과 12·12군사 쿠데타를 물리쳤고,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낸 도시"라면서 "대한민국과 광주에

서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강 시장은 또 이 같은 자신의 입장을 비판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충돌을 유발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집회를 강행하는 극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면서 "나 의원이야말로 내란 동조세력이 되지 말고, 헌법을 지키는 호헌 세력이 돼 달라"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 무조건 '극우'이고, 광주 시민도 아니라는 말이냐"며 "5·18 광장은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모두의 공간이고, 헌법의 집회·결사의 자유도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을 배척하고 표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이며 5·18민주광장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극우 유튜브 안전권씨가 지난 8~9일 5·18민주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문의했으나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근거로 승인하지 않았으며, 보수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집회 원도도 거절된 상태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보수 성향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유튜브 전한길, 황교안 전 총리 등이 1000여명이 참석하는 기도회 등 집회를 강행할 예정으로, 지역 시민사회 등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집회 예정일인 15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49재로, 무등빌딩 앞 바로 맞은 편 전일빌딩 245 내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49재 추모 행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

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빌딩 바로 옆 5·18민주광장은 1980년 5·18 당시에 전두환의 학살 만행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켰던 최후 항쟁지"라면서 "계엄 내란 지지 집회를 5·18민주광장에서 한다는 것은 5·18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5·18 트라우마를 안고 사는 시민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허할 수밖에 없으며, 인근 무등빌딩 집회도 예외주사해 5·18 폄훼 발언 등이 있을 경우 5·18 특별법 8조에 의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일부 보수성향단체들이 2023년부터 2년여간 정율성의 여러 행적을 들어 동구 불로동에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건립 철거 등을 요구하는 바람에 때이른 이념 논쟁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새 학기 교복 나눔 장터 열렸어요" 신학기를 앞둔 11일 학부모들이 광주시 북구 우산동 새마을부녀회 상설교복나눔장터에서 자녀들의 교복을 고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복절 이어 3·1절 기념식도 들로 갈라지나

### 항단연, 정부 기념식 불참 선언

광복 80주년인 올해 삼일절 행사도 지난해 광복절과 같이 쪼개져서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 체인업(항단연)은 11일 "정부의 3·1절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 기념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항단연은 "진일·독재를 미화하며 독립운동사와 민족정기를 훼손해 온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요직에 여전히 있는 현 정세를 규탄하는 것"이라고 정부 기념식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계속해서 발표했지만, 시정언론 비사계엄을 선포하고 독재정권을 추구한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는 세력이 개최하는 삼일절 행사의 진정성과 역사 인식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광복회는 정부가 준비하는 삼일절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는 참가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 입장이다.

광복회 관계자는 "지난해의 삼일절 행사는 뉴라이트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다"며 "그런 식의 메시지가 또 나온다면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엔 광복회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듯한 방향, 이를테면 무장·독립 투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의 내용이 나오면서 독립운동의 가치와 본질을 왜곡했다"며 "삼일절 행사가 작년 수준에서 된다면 우리는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광복회 등이 뉴라이트로 지목한 김형서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광복회가 정부 주최 경축식에 처음으로 불참했고, 항단연 등과 함께 별도 기념식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 美 "3월 12일부터 한국 등에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 기존 면세쿼터 폐기...반도체·車·의약품도 검토 대미수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발표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한국에도 전면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발 보호주의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기사 9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포고문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철강제품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예외를 적용했던 한국 등에도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포고문은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집권 1기 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했던 국가들을 열거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

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3월 12일자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고문은 그러면서 한국 등 각국이 이날 발표된 25% 관세의 적용을 3월 12일부터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는데, 이번에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한국은 2018년 트럼프 1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당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별도 합의를 도출한 뒤 그동안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 톤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받아왔으나 내달 12일 이후로는 한

국의 모든 대미 철강·알루미늄 수출 물량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게 됐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몇주간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어다볼 것이며, 그다음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자동차에까지 새롭게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들 사이에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상대국 제품에 관세율을 부과하는 개념의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 지난해 한국 국가 청렴도, 180개국 중 30위

### 12월 비상계엄은 반영 안돼

지난해 대한민국 국가청렴도 순위가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전년도 32위보다 두 계단 오른 30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패인식지수 점수 평가 체계가 바뀐 2012년 이래 역대 최고 순위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위는 전년도 조사 당시 7년 만에 하락했으나, 1년 만에 전년도 선순위였던 서아프리카 선다라 코보베르데(30위→32위)를 제쳤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

위는 전년보다 한 계단 오른 21위로 상승했다.

부패인식지수 점수 역시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전년(63점)보다 1점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순위는 지난해 10월까지 국가청렴도를 조사한 수치로 12월 비상계엄이 정부 주체로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국가적 차원의 부패 방지 노력이 국가청렴도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압호화법 제정 등 신중 부패 발생 요인의 확대와 정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양극화 등은 대외의 부패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지방·일선 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부패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품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창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주민 의견 청취 공고

2025년 2월 12일  
**해 남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 치: 해남군 삼산면 상가리 405-5번지 일원  
나. 해제목적: 전라남도 지역특화농수산물판매권업사업  
다. 해제근거: 농지법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라. 면적: 4,447㎡ (9,895㎡)

2.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관민복지조사: 해남군 홈페이지, 해남군청 농정실, 삼산면사무소  
- 관 민 도 면: 개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나. 열람기간: 2025. 2. 12 ~ 2. 26(공포일부부터 14일)

3. 기타사항  
가. 해남군 홈페이지 및 관민복지조사에 공고하오니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에 따른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시연으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처: 해남군청 농정과 농업정책팀(☎061-530-5357)

\* 위 공고는 계획(안)으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 변경될 수 있음.

### 영일정씨유지공문증 정기총회공고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결정 사건번호 2025기림50017 칙부대행자 선임가처분 위 사건번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총회를 개최하오니 중증중증에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열 시: 2025년 2월 16일(일요일) 오전 11시  
장 소: 지실 기사문화회 강당  
• 의제 안건: 회장 및 부회장 선거  
2. 후보자 접수일시: 2025년 2월 13일  
장 소: 13시~17시 41호

• 제출서류: 이력서(사실), 주민등록초본1통  
• 후보자 접수 장소: 지실 마을회관  
• 접수(지급금 총무 태수): 010-8345-7663  
3. 회장의 선출권: 관리위원회장 담당발표  
4. 감사선출  
5. 사무인수인계 실시 회장직무대행 인회사행

2025년 2월 12일

영일정씨유지공문증회장 직무대행 (최인생학)  
010-3629-5339 최백

### 분묘개장공고(제2차)

2025년 2월 12일  
**여수 시장**

1. 분묘 소재지

소재지	면적(㎡)	분묘가수	비고
전남 여수시삼산면 덕촌리	1082	1	
전남 여수시삼산면 덕촌리	1086	3	

2. 개장사유: 거문도 농어촌관광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3. 개장방법  
가. 유언분묘: 공고기간 중 응자와 협의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종료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4. 무연분묘 안치장소: 전남 여수시 소래면 봉두리 영락공원(추묘의 집)  
5. 안치기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 및 신고기간: 2024. 12. 18. ~ 2025. 3. 18.(최초공포일부부터 3개월)  
7. 구비서류: 신고(연고)자는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의 관계증명서류(제적 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사산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삼산면 사무소로 신고 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 타: 사업성 중 추후로 확인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장 등 기타 사항은 여수시장 자원시설과(☎061-659-3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선

북 구	• 통 권 266-1920	• 문 권 266-1960
	• 북광주 925-3761	• 신 권 222-8171
	• 광 선 571-7658	• 오 처 266-7001
	• 용 통 433-1503	• 우 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936	• 통 권 222-0054
• 부 225-8001	• 송 권 222-0054
• 통 권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936	• 북 권 651-1833
• 북 선 673-6936	• 송 권 675-6805
• 진 권 671-7276	

서 구

• 권 382-5788	• 삼 부 372-2352
• 서광주 369-1625	• 문 선 376-7153
• 치 경 376-6511	• 통 권 603-0311
• 장 경 369-1625	

광산구

• 문 권 952-1687	• 월 권 959-1920
• 정 단 973-2900	• 하 권 955-0451
• 광 선 944-0444	